어쩌다 이 지경까지… 넋잃은 교육계

"쏟아지는 각종 비리 감당 못해"

시·도교육감회의 자탄 목소리

징계·순환 인사 등 대책 고심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긴급히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는 시작부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교육비리 사건들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16개 시도 교육감, 교육감 권한대행들의 얼굴에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하는 자탄이 역력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모두 발언은 거의 질타와 훈계로 40여분 간이나 이어졌다.

역시 침통한 표정의 안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냉정을 되찾고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자"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느 분야보다 깨끗하고 신성해야 할 교육계가 이러한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며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교장,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알몸 졸업식 뒤풀이 사건을 언급할 때는 "경위 파악을 위해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았는데, 교장과 교원들의 낮은 책임의식에 너무 놀랐다. 우리가 어떻게 교장들을 교육한 것인지 자괴감이 든다"고까지 했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감들이 느끼는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이유는 이날 회의 주제로 오른 교육관련 사건들이 단지 한 두건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학교공사, 급식, 인사비리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알몸 졸업식 뒤풀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충격"이라고 언급했을 만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부적격자들이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일부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는 첩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자칫 교육비리 사건이 '정점'인 입시부정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안 장관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교육비리가 너무 많아 정말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대적인 교원 인사제도 개편,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구성, 교과부·교육청 상시 감찰반 편성 등이 주요 대책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고질적인 교육계의 병폐를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 교과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논의된 대책과 태스크포스에서 연구한 세부 방안들을 모아 다음달 초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근 잇따른 교육비리 파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25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교육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안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전남도교육청 고강도 반부패·청렴 대책 추진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고강도 반부패, 청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직윤리와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공직윤리 감찰반과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집중 감찰하는 금품수수 감찰반 등 2개반 16명으로 구성·가동에 들어갔다.

감찰반은 신학기를 맞아 촌지 및 금품수수 행위, 불법찬조금 모금,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집중 감찰하게 된다. 집중 감찰은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되며 적발자는 중징계 등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을 받으면 해임 등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또한 부서내 부패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서장 연대책임제와 비리 신고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학부모 등 전문가를 명예 감사관으로 임명해 자체 감사 및 민원조사에 공동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인사철에는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제, 교육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청렴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도 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단을 구성해 추진사항을 평가하는 등 청렴대책이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페어링 분리시험 성공…6월초 나로호 2차 발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페어링〈사진〉 분리시험이 두 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다.

25일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연구원 발사체시험동에서 '페어링(비행모델) 분리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나, 페어링이 분리되기 3초전 지상본부에서 발사체 탑재물에 대한 전원공급에 이상이 생기면서 분리되지 않았다.

예정대로라면 오후 3시10분 발사된 발사체는 219.4초 뒤인 오후 3시 13분께 정상적으로 페어링이 분리됐어야 했다.

첫번째 시도에 실패한 연구원측은 전원장치에 대한 긴급 점검 및 복구작업을 벌여 2시간 후인 오후 5시부터 시험을 재개했으며, 정확히 219.4초 뒤인 오후 5시13분께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이주진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전기·기계적 장치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확인 시험을 벌이고 있다"며 "러시아에서 발사체 1단이 들어오면 조립작업 등을 거쳐 6월초께 나로호 2차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인 8표 두차례 나눠 4장씩 투표

정당 무관 교육감·교육의원 먼저

지방선거 투표방식 확정

'1인8표 제'가 적용되는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1·2차로 나눠 색깔별로 나뉜 투표용지 4장씩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를 하면 된다.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선거 투표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 한 사람이 무려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장씩 투표용지를 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결정한 투표방식에 따르면 유권자는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를 먼저 한 뒤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마치면 된다.

또 투표용지 색깔은 ▲백색(교육감, 광역단체장) ▲연두색(교육의원, 기초단체장) ▲하늘색(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계란색(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투표용지 너비도 ▲7.5㎝(교육감, 교육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9㎝(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두 종류로 달리했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가 정당추천과 무관한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를 먼저 기표할 수 있도록 해당선거를 1차 투표대상에 포함하고,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순으로 투표용지를 교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감, 교육의원 투표용지 상단에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또 정당, 기호 표시 없이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李대통령 "헌법에 손 대야"

개헌논의 급물살 탈 듯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제한적 개헌론을 공식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문제도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법을 바꾸고 개혁적인 법안을 만들 때 국가의 미래라는 관점을 두고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제한적 개헌 필요성을 공개 제기함에 따라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날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이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부터 시작해 정당(제도), 선거(제도) 등 이 모든 것이 정치개혁 아니겠느냐"면서 "금년 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연내 개헌 논의와 함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라는 개헌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